

# 5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  
- 편집자 주 -

##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(0~1세)에게 양육수당 지원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'09.5.11.(월)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.
-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  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. 다만,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 0~1세(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) 아동에게 우선 지원된다.
-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(4인가구 기준)이하 이고,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한다.

**'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**

(단위: 만원)

가족수 \ 소득수준	3인	4인	5인	6인
최저생계비 120%	129	159	188	218
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

-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.

**■ ■ ■ 전체 영유아의 40% 어린이집 이용**  
- 2008년 하반기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발표 -

- 2008년말 현재 보육시설(어린이집)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총 114만명이며, 이 중 73만명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만 0~5세의 영유아만 고려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아동 274만명의 40%인 110만명으로, 2007년보다 전체 영유아 수는 9만명 감소하였으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104만명에서 110만명으로 6만명이 늘어났다.
  -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~5세 아동 53만명을 더할 경우 전체 영유아의 59%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. 이는 2007년의 52%보다 7%p 증가한 것이다.
  - ※ 주로 만 0~5세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취학유예, 장애, 방과후 등의 이유로 만 6세 이상의 아동도 다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
-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64%인 73만명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비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■ ■ ■ 지난 8년간 아동학대실태 분석 결과**  
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.3배, 보호아동수는 2.6배 증가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도 아동학대 상담·보호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『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』를 발간하였다.
- 지난 8년간(2001→2008) 전국의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약 2.3배,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약 2.6배 각각 증가하였다.
  - ※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: '01, 4,133건 → '08, 9,570건(2.3배 증가)
  -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: '01, 2,105건 → '08, 5,578건(2.6배 증가)
-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, 상담원 증원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, 아동학대신고의 무자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따른 국민의 인식 향상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아동을 잘 발견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  - ※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: '01, 17개소 → '08, 44개소
  - 상담원 증원: '01, 129명 → '08, 302명
  -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: '01, 26.3% → '08, 33.1%
- 한편 동 기간 동안 아동학대행위는 80%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, 학대유형 중에서는 방임이 30% 이상을 차지하였고, 사망아동수도 연평균 8명 이상이 발생하였다.

-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'아동학대 부모교육 동영상' 자료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에서도 상영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,
  - 재학대방지를 위하여 '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'을 개발,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·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    - 특히 방임은 경제적, 사회적, 심리·정서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므로 '드림스타트'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, 방과후 프로그램, 영유아 발달지원, 학대예방·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    - ※ 드림스타트: 16개소('07)→ 32개소('08)→ 75개소('09)→ 110개소('10) 예정

**■ ■ ■ 복지부, 금융기관에 생계비 용자사업 업무위탁**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5월 13일(수) 15:00,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,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,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"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지원사업"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.
  -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"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지원 사업"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용자 신청, 담보설정, 용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.
  -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,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-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하여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
  -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·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용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용자금을 지급하게 된다.
  - 이러한 신청·조사체제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해졌다.

**■ ■ ■ 복지부, 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**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.

- 따라서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체조직의 영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을 평가함으로써
  - 인체조직이식재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「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」을 시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.
- 추진일정은 5월초 「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와 「인체조직의 영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(고시)」제정안 입안예고,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·시행할 계획이다.

**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**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5월 8일(금)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.
-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·육성, 소비자 선택권 보장,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에서
  -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, 양·한방 협진 제도화, 중소병원 전문화, 의료채권제도 도입,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(MSO) 활성화, 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.
  -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,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한편, 찬반논란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(영리의료법인)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, 의료계, 시민단체,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
  -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·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,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.

**■ 알코올중독 예방, 음주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**

-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,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고, 이로 인하여 알코올중독에 이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, 음주로 인한

- 사고와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
- 전국 253개 보건소 및 34개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하여 건전음주 사업,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
- 음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절주공익광고를 '09. 7월부터 송출할 예정이며(TV, 라디오는 4월부터)
- 일반 성인(33.0%)에 비해 높은 고위험음주율\*을 보이는 대학생(51.1%)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대학별 절주동아리를 확대('08년 18개 → '09년 30개) 지원하고 있는데, 축제가 집중되는 5월 절주동아리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.
  - \* 고위험음주율: 남 소주 1병, 여 소주 5잔 이상
- 건전음주캠페인 미니홈피를 개설(<http://www.cyworld.com/nomoredrink>)하여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  - \* 절주동영상, 절주송(애니메이션), 플래시로 제작된 영상물, 절주UCC 수상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
-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
  -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상담과 치료·재활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관리('08년 말 3,797명)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    - 향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사례관리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임.
-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음주수칙을 만드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.

**■ 장기요양서비스, 집 가까운 요양시설 선호**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, 이하 “공단”)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거나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입소시설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- 공단은 이번 분석에서 서울, 부산 등 광역시지역 시설에 대한 입소희망율이 110%인데 반해, 군지역 시설 입소희망율은 81%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
  -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시설의 환경이나 청결상태와 같은 시설상태도 살펴보지만,
  - 접근성이 용이하여 가족들이 부모님을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요양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.
- 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에 대한 입소희망율이 143%로 사회복지법인(90%)이나 개

인(80%)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높아,

- 수급자와 그 가족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 보다는 공익성이 강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따라서, 앞으로는 수급자가 생활권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이 모자라는 서울·부산 지역 등 광역시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- 특히 서울지역은 지가가 높아 민간이 참여하기 힘들어 공공 부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, 수급자들도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부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.

### ■■■ 홀로 사는 어르신, u-Care로 안심하세요.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가 행정안전부(장관 이달곤)의 u-공공서비스 확산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「독거노인 u-Care 서비스」 사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○ 이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가스누출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, 응급 상황시 소방대원이 긴급출동·구조하도록 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이다.

○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질병으로 쓰러져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대비, 집안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보다 부족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전화 확인 또는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독거노인 u-Care 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역, 5,550여 어르신에게 제공되었으며, 지난 3개월 동안 이를 통해 응급구조를 받은 어르신은 61명에 달한다.

○ 대부분 본인이 응급호출을 한 경우지만, 화재의 사전 자동감지 및 조치를 통해 큰 사고를 막은 경우도 35건이나 된다.

□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자, 올해 총 43억원(정부지원금 17억원, 지자체 부담금 26억원)을 투입하여 서산시(충남), 문경시(경북), 김제시(전북), 광양시(전남), 삼척시(강원), 동해시(강원) 등 6개 지역, 9천명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경제력을 갖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민간 기업이 u-Care 서비스를 결합한 복지형 민간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### ■■■ 긍정심 결과: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:전재희)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

○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,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~50%에서 - 5월 20일부터는 20%로 줄어들며,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·외래 모두 10%로 낮춤.

○ 이번 결정으로 약 6,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,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

□ 아울러,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총수(맹장)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,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

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7월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(100% - 30%) 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를 시행하고 있는 병·의원에도 적용하기로 함.

□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(CARVAR)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3~5년간 심층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,

○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인정

□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귀·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에 대하여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\*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

\* 「리펀드제도」: 필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약품의 약가 협상 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 차액을 환원하여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

- 리펀드제도가 약가 협상시 활용될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품에 대해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다만 금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본인부담금 환급 문제, 리펀드 대상 약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함.